민주 지방선거 공천 오락가락

광주시장, 시민배심원 표류

강기정 의원 빼고 지역국회의원 대부분 도입 반대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의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문제가 더욱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지난 7일 광주시장 후보 경선 방법과 관련, 광주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취합, 재논의키로 했으나 광주시장 경선 주자인 강운태, 이용섭 의원을 제외한 6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5명이 '국민참여경선' 실시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김동철 광주시당 위원장이 이날 정세균 대표와 만나 광주시장 경선 방법에 대한 광주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전달함에 따라 오는 1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선 의원은 광주지역 국회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최고위에서는 광주시장 후보 경선 방법에 대한 광주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뒤,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일보가 광주시장 경선 예비 주자인 강운태, 이용섭 의원을 제외한 6명의 광주 국회의원들에게 광주시장 경선 방법에 대해 질의한 결과, 강기정 의원을 제외한 5명이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동철 의원은 "개인적으로 국민참여경선이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또한, 광주 국회의원 대다수가 국민참여경선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 대표가 '시민공천배심원제는 국민참여경선에서의 동원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며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없다'며 '광주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반영, 최대한 숙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불가를 주장하고 있는 박주선 의원은 "광주시를 전략 공천 지역으로 선정,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할 명분이 없으며 '혼합형 시민공천배심원제'는 당헌 당규 위배 사항"이라며 "국민참여경선 도입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원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영택 의원은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는 것은 두 차례나 정권을 창출한 광주시민의 역량을 폄하하는 것"이라며 "광주를 대표하고 살림살이를 맡을 후보를 외부 인사들이 선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국민참여경선 도입을 주장했다.

김재균 의원도 "시민공천배심원제는 정당정치, 책임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물론 국민참여경선의 보완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재유럽한인총연합회 총회 참석차 지난 6일 출국, 독일을 방문하고 있는 김영진 의원도 박주선 의원과 기자들에게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이에 반해, 강기정 의원은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의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남지사, 경선방식 신경전

주승용·이석형 "국민·당원 투표로" 박준영 "여론조사로"

전남도지사 경선방식을 둘러싸고 후보들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중앙당이 도지사 경선방식을 '국민여론조사 50%와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로 결정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주승용 의원과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8일 도의회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론조사 반영비율을 50%로 한다는 것은 현직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면서 "여론조사 반영비율을 20%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중앙당에 건의한 만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선에 나서지 않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결과가 뻔한 경선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주 의원은 이어 "여론 조사 반영비율을 50%로 하느니 차라리 시민배심원제로 가는게 후보자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데 낫다"며 "이석형 후보와 공동기자회견을 등을 통해 재차 의견수렴을 요구하고 이마저도 무시된다면 경선을 보이콧 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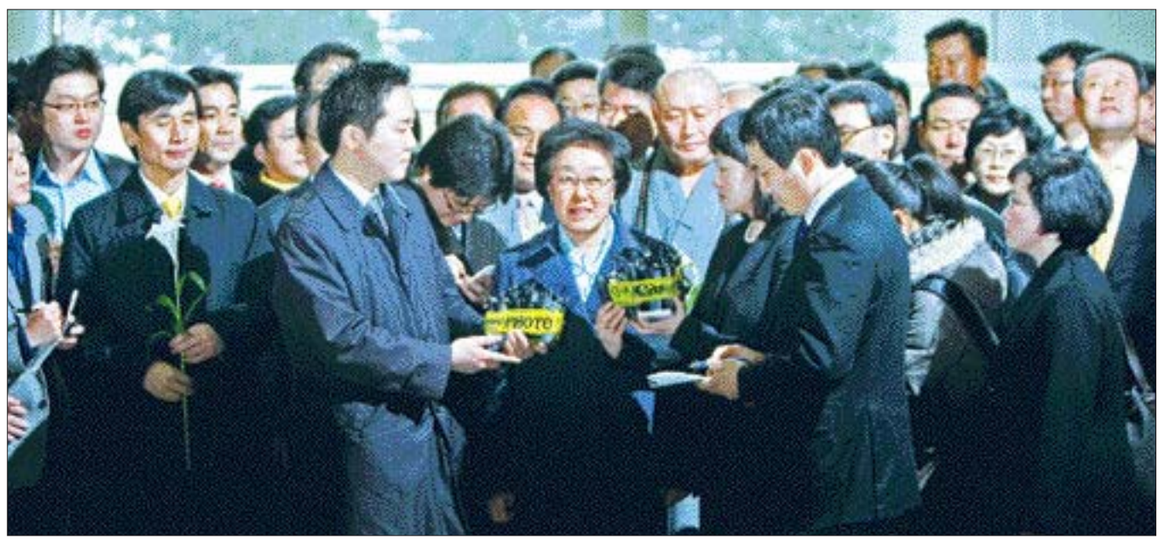
이석형 전 군수도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낮추고 체육관 경선을 해야 하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그는 "여론조사가 인지도 조사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고 현역 프리미엄이 강하게 작용하는 특성상 비율을 최소한 20% 이내로 낮춰야 한다"면서 "여론조사보다는 도민들이 한 장소에서 후보들의 정견발표 등을 들어보고 현장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대당원과 일반당원을 중심으로 한 당원선거인단 투표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됐다.

주 의원은 "무안·신안(1천300여명), 나주·화순(500여명), 해남(800여명) 등 서남부 지역의 우대 당원이 전남 전체의 70%에 이를 정도로 편중돼 있는데다, 당헌·당규에 우대당원과 일반 당원의 구분이 없어 경선 방식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각종 여론 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국민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이 돈 안 드는 선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고 있다. 일반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높을수록 유리한 박 지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박 지사는 특히 체육관 경선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동원 경선 등 폐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국민이나 당원 모두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후보 간에 경선방법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중앙당의 경선룰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5만불 받지 않았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이해찬 전 총리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지인과 변호인단과 함께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5만불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

"시민배심원제 도입은 광주 매도 행위"

박주선 민주 최고위원

"광주는 민주당의 노예가 아닙니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8일 광주지역 국회출입기자들과 만나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광주를 매도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시민과 당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어려울 때에도 광주시민은 변함없는 지지와 애정을 나타냈고 당원들도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며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는 것은 광주시민과 당원의 투표권을 뺏는 것이며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된 '시민공천배심원제 + 당원 전수조사'의 혼합형 경선안은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기어이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겠다면 차라리 특정 인사를 전략공천하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박 최고위원은 "시민공천배심원제는 야권 연대를 통한 후보 선정이 필요한 수도권 지역 등에 적합한 방법"이라며 "특히, 준비되지 않은 시민공천배심원제는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국민참여경선안에 최고위원 몇 사람도 동조하고 있다며, 관철을 자신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강운태系 3명 단일화…광주 남구 선거판도 요동

시민배심원제 도입 여파…무안도 변화 조짐

광주 남구청장 선거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한때 10명이 넘는 입지자들이 혼란스럽게 경쟁을 하던 광주 남구를 민주당 중앙당이 8일 시민공천배심원제 채택 지역구로 확정한 데 이어 강운태 의원 측 후보 3명이 단일화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무안군에도 시민공천배심원제가 도입되면서 후보들은 유·불리를 따지며 대응방안을 찾느라 부산한 하루를 보내는 등 선거판이 들썩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광주 남구와 무안군 등 전국에서 8개 지역을 1차 기초단체장 시민공천배심원경선지역으로 결정했다.

광주 남구의 경우 이날 현재 민주당에서 김영집 전 국가균형발전위 국장, 김화진 광주시당 부위원장, 나종천 광주시의원, 박용권 오성장학재단 이사장, 이철원 광주시의원, 이호준 전 남구 부구청장, 정범석 전 남구의회 의장, 정재수 남구 재향군인회장, 정재훈 동아병원장, 최영호 전 광주시의원, 황일봉 남구청장 등이 경선을 준비 중이다.

시민배심원제에 따를 경우 조직선거를 준비해온 후보들에게는 그동안 노력이 허사가 된 반면 차분하게 지역사회에 봉사해온 후보들이 희망을 빛을 보게 됐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이에 따라 시민운동가나 전문가 출신 후보들이 기대를 한껏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부패 경력이 있거나 지역구·당적을 옮기는 등 구태정치를 해온 후보들은 바싹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친 강운태 의원' 측으로 분류되는 이호준·정재수·최영호 예비후보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지층이 겹쳐 후보단일화를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단일화에 합의했다"며 "민주당 경선후보 접수 이전인 15일까지 후보단일화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남구의 최대 주주인 강운태 의원 측 후보들의 단일화는 황일봉 남구청장 등 다른 후보들을 충분히 긴장하게 할만한 카드로 지역 정가는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또 무안군수 후보 경선에도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 후보들을 당황하게 했다. 그동안 대부분 후보는 국민참여경선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갑작스런 결정의 배경을 파악하고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부산했다. 서삼석 군수, 김석원 전남도의원, 임재택 전 문태고 교장, 정해균 전 여수부시장 등은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김철주 도의원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